



權 肅 杓 /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

# Green Round의 물결을 직시하자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된것은 세계여러 선진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환경오염이 많은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고 계속 오염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이었다.

1952년 12월에 영국, 런던시에서 발생한 런던스모그는 12,000여명의 호흡기병 사망자를 내고, 1953년 일본 미나마타시에서 발생한 유기수은중독 사고는 1962년까지 약 6000명의 신경마비환자와 4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그 밖에도 산업이 발전하는 나라에서 많은 환경오염과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이것들이 계기가 되어 산업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충격적인 환경오염을 실감하고 경계하게 되었고 각국은 오염물배출을 강력히 규제하게 된것이다.

그러나 환경오염은 항상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였고 더욱 확대되어가고 있다.

과거의 환경오염은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한정된 지역주민의 피해에 끝났으나 이제는 전국에서 또는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그 피해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에서 과거에 알려지지않았던 새로운 오염물과 그 유독성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피해도 규명되어가고 있다.

최근에 WHO, UNEP, 미국 EPA 등에서 제시된 오염물의 유해성평가(有害性評價)는 과거와 같이 인체에 대한 단기적, 직접적인 해독성만이 아니라 생태계에 미치는 장기적, 간접적인 유해성까지를 실험평가하여 변이원성(變異原性), 발암성(發癌性), 면역독성(免疫毒性)과 생태계독성(生態系毒性), 장기축적성(長期蓄積性)을 규명하여 환경오염물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유해성평가에 따라 수질과 대기 토양 오염물로 규정된 많은 오염물의 배출원과 배출허용기준이 규제대상이되고 정부의 감시를 받고있으며 이러한 오염물의 종류는 계속 증가해가고 있다. 최근에 일본의 대기중에서 발견된 방향족탄화수소인

변이원성물질만도 25종에 달하고 그 중에서 Bap(벤즈파이렌)은 1974년부터 대기오염측정망에서 계속 측정하고 있고 발암성물질도 59종이 검출되었다. 또 미국에서는 음료수 수질기준으로 독성이 인정되어 1991년 6월에 38종의 오염물의 최대오염농도목표(MCL-Goal)를 규정하였다.(phase II Organic and Inorganic Contaminant Regulations)

이와같이 환경오염물을 계속 조사하고 규제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공업발전과정에서 새로운 오염물이 증가하고 있고 둘째로는 그 오염물에 의한 위해성이 증가하고 있기때문이다.

그 피해는 인간에 미치는 피해도 있으나 더욱 광범위한 생태계의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파문을 이루고 있는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나 성층권의 오존층파괴는 과거의 오염물이 아닌 탄산가스나 CFC 등에 의해서 발생한 지구규모의 환경오염이다. 또 산성우에 의한 생태계파괴현상도 최근에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같은 새로운 환경오염과 피해는 근본적으로 산업기술과 개발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산업기술은 계속 전세계에 확산되고 발전하고 있어서 환경오염과 그 피해는 더욱 다양화하고 심화되어 결과적으로는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은 추세는 우리나라도 예외일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은 선진공업국에서 일어나고있는 모든 환경오염이 산업기술의 다양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환경대책은 과거의 환경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답습하고 그 기준을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는 외국의 오염규제에 미치지 못하고 따라서 외국에서 분명한 오염물에 대해서도 규제가 없는 경우에 그 대책은 무시되고 또한 방지기술이나 투자도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첫째로는 배출원에서 당연히 처리하여야 할 오염물을 충분히 처리하지 않으므로서 처리비를 절감한 것은 생산가의 부당한 덤핑으로 보고 또 다른면은 오염물을 부당하게 배출하므로서 불특정다수의 국민에게 사회적, 경제적, 보건상의 피해를 주게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서 일찌기 문제를 제기하고 소위 「오염산업」(汚染産業)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 산업을 제도적, 사회적으로 억제하기 시작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수은, 카드뮴, PCB 등 오염물을 대량배출하므로서 큰 공해사고가 발생한 산업체를 공해산업이라고 명목으로 일본에서 이들 산업을 축출하였고 그 후 계속 오염물발생이 많은 산업에 제도적, 사회적압력을 가하므로서 이들 산업은 사양화하였다. 이것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공해산업을 저항없이 많이 수용한 것이다.

그 예가 아연제련공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고 농약BHC를 일본에서 금지한 그 해에 우리나라에서 그 생산공장이 가동되기도 했다. 또 일본으로부터 대량의 폐건전지가 납(鉛)의 원료로 수입되고 있고 미국에서 대량의 폐지(廢紙)가 제지원료로 수입되고 있다. 이들 공업이나 폐기물이 수입되는 이유는 원료나 제품이 싸고, 또 우리나라 공업에 필수품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된다. 그러나 그러한 오염산업. 폐기물이 도입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에서 발생하는 오염은 우리나라의 국토에 막대한 오염을 유발하게 되거나 또 그 오염을 받지않고 시설투자가 막대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1988년초에 미국은 한국등 개발도상국의 환경대책을 치밀히 조사하고 배출허용기준과 환경기준의 격차를 경제적부담의 회피로 평가하였다. 다시말해서 동일제품의 생산유통에는 동일한 환경대책비가 가중되어야한다는 이론이다. 그렇지 못한 제품은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서 국제시장가격을 교란하게 되고 환경보전을 강력히 추진하는 국가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국제경쟁시대에서 타국의 환경보전대책에 강한 관심을 나타내는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환경오염이 국제적으로 공통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주고있기 때문이다. 대기오염은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것만 아니라 오염물이 국경을 넘어 인접국에만 아니라 전 지구에 확산되

어 지구적오염이 발생하고 그 피해를 전세계인구와 전지구상의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것은 전세계의 의무라는 해석이다.

이러한 범세계적 관심은 최근에 국제적인 문제로 등장한 「지구의 온난화」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국경을 초월한 산성우의 피해」 등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환경문제는 강대국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에서도 환경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강대국은 환경오염을 이유로 개발도상국들에 오염규제를 강요하고 에너지 등 환경이용을 제약하는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이미 유발된 환경오염의 책임을 강대국에 전가시키고 있다.

마치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사태로 환경문제를 제재시켜 발전도상국을 대상으로한 경제적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문제를 일찌기 경험한 공업선진국에서는 그간 환경오염방지기술과 제도가 발전해왔고 엄격한 환경기준이 적용되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고도의 환경기준을 적용할 만큼 환경기초시설의 투자와 기업의 방지기술이 따르지못하고 있어 국제적 간섭을 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미 오존층을 파괴하는 CFC의 사용을 2000년까지 전폐하겠다고 한 몬트리올의정서의 협약에 앞서 미국에서는 1995년까지 CFC의 대체품을 개발하여 몬트리올의정서의 협약에 앞서서 CFC사용제품의 수입사용을 1996년부터 제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미국, EC 등은 탄소세(炭素稅 - Carbon Tax)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금년 6월에 개최되는 UNCED회의에서는 이러한 국제적협정이 크게 표면화할 것이고 국제간의 쟁점으로 부각될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러한 국제적간섭에 대해 불안과 불이익만을 생각할때가 아니라 한국의 환경보전대책이 개발도상국을 대표할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대책을 유도하는 위치에까지 발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모방이나 기술지원에 의존하는 종전의 관례에서 탈피하여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환경보전대책기술을 확립발전시킬 때라고 생각한다.